

<세션2 - 글로벌 ESG 동향과 동남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전략>

허성욱 |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교수

2017년 한국일보 허성욱 교수 칼럼 중 발췌

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다. 취임 후 대표적인 기후변화 부정론자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하고,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청정에너지 계획을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흐름에 반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을 감행하고 말았다.

온실가스배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깨끗한 지구는 누구에게도 권리가 귀속되지 않은 공유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. 세계 각국의 구성원들은 그 공유지에 탄소배출행위를 함으로써 산업적·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도이다. 공유지로서의 탄소배출행위 이익은 그 배출행위를 한 주체에 온전히 귀속되지만, 그로 인한 비용은 현재 및 미래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나뉘어서 귀속된다. 각 배출행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배출행위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. 문제는 각 배출행위자들의 이러한 합리적 선택들이 집합적으로 결집 되면 공유지 전체의 소멸 및 그 공유지에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인류의 소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.

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‘상호 합의에 따른 상호 강제(mutual coercion mutually agreed upon)’가 필수적이다. 각 구성원 입장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상호 합의를 지키는 상황에서 자신만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면 언제나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 위의 전체 구성원들이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는 것은 매우 어렵다.

그와 같은 관점에서 파리기후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공유지의 비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구성원들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르게 된 소중한 상호 합의이다.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 낸 합의가 미국과 같은 주요한 국가의 지도자에 의해 무력하게 된 것은 그것 자체로 비극이다.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합의가 무력하게 된 상황에서 자국의 산업적 이익을 희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로부터 이탈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적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.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.